벼랑끝 내몰린 전남농업

쇠고기값 폭락…축산업 年 648억 피해

한우산업 붕괴 위기
퇴출농민 속출할 듯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전남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한미 FTA는 전남 농업에서 쌀 다음가는 주요 소득원인 한우를 포함한 축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40%의 수입 관세에도 한우가격의 3분의 1선에 머물러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전남을 비롯한 전국 한우농가들은 극심한 침체를 겪을 것이 불보듯 하다.

◇최대 피해자는 축산농=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에 의한 전체 농산물 생산감소로 인한 피해액을 단기적으로 최소 1조 1천552억원~최대 2조 2천830억원, 장기적으로 최소 9천240억원~최대 2조 134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아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 FTA가 양국에서 비준 받은 후 발효돼 현재 40%로 되어있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관세가 5년간 8%씩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전국 한우농가의 생산감소액은 연간 2천39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2006년 기준 전국 한우 생산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피해액은 367억원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닭고기·우유 등을 포함한 연간 국내 축산업 총 피해액은 5천8억원, 전남은 연간 모두 648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점쳐졌다.

또 40%의 쇠고기 수입관세를 10년간 4%씩 줄이면 전국적으로 연간 2천214억원, 전남은 연간 339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전국 축산업의 총생산감소액은 연간 4천328억원, 전남은 556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전남지역 한우농가의 피해는 연간 4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의 축산업 비중은 전국의 15%. 전남 축산업 가운데 품목별 점유율은 한우가 15.2%로 가장 높고 참여 농가도 3만 4천800여 호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계적인 관세축소에 따라 소비자들이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할 경우 한우농가의 홍수출하로 이어지면서 축산업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다. 산지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kg당 한국이 4만 3천500원(2등급/양지)인데 반해 미국산은 1만 5천원으로 추정돼 3분의 1선이다. 따라서 비록 시차를 두더라도 미국 쇠고기 수입관세가 낮아지면 가격차이는 더 벌어져 사실상 한우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농업 피해 일파만파=한미 FTA에 따른 전남 한우산업에 닥친 위기는 농업의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농촌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전남의 전국대비 점유율이 높아 한미 FTA에 따른 생산감소액의 여파가 커 농촌사회의 기반을 뒤흔들 충격파를 몰고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보리는 전국의 52.4%, 양파 51%, 마늘 39%, 배 23%, 콩 23.3% 등이다. 이처럼 생산비중이 큰 농산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미국산 수입량이 증가할 경우 전남지역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업경쟁력 상실로 인해 퇴출농민들이 늘어 도시근로자 양산을 불러오고 이에 따라 고용구조가 불안해지는 등 농촌에서 발생한 FTA 충격파는 사회구조 전체의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미 FTA 농업협정의 더 큰 심각성은 그 후폭풍이 농업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1일 오후 3시55분 막바지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앞에서 200여m 떨어진 도로 위에서 허모씨가 분신해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효과 미미…내수판매는 감소

■기아차 광주공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철폐되는 미국의 수입관세가 2.5%에 불과한 데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의 현지생산 확대로 수출증가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59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고, 이중 27.4%인 71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최대 수출시장인 셈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31만2천622대를 생산, 63.5%인 19만8천950대를 미국과 EU에 5 : 5 정도로 수출했다. 올해에는 38만5천대의 생산량 가운데 65.5%인 25만2천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조만간 미국 조지아주에 착공될 연산 30만대 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은 광주공장과 차별화될 것"이라며 "이번 FTA 타결로 광주공장의 대미 수출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와의 경쟁은 불가피해 시장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차의 경우 수입관세 8%가 감면되고, 취득단계에서 특별소비세·부과세 등 관련세금이 동반인하돼 공급가격 기준 10.5%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아차 판매분야 관계자는 "2000~2005년 미국차의 국내 수입증가율은 8.4%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2%에 불과해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그러나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수입 촉진효과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생산규모가 연간 330만대에 달하는 도요타·혼다·닛산 등 미국내 일본업체 생산차량의 우회수입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미국내 일본업체 생산차량의 국내 우회수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부담 완화 및 단순화 등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특별기고

박준근

값싼 美농산물 홍수 우려
고품질 농산물만이 살 길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물결이 기어이 농업분야까지 범람했다. 지금 온 나라가 한·미 FTA 폭풍 앞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위압적인 협상태도에 새삼 놀라움을 느낀다.

더 놀라운 문제는 국내에서 비농업분야의 FTA 찬성 압력에 농업부문의 반대목소리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수입되고 있고, 중국은 우리 시장에 자국 농산물을 더 수출하기 위한 특별계획을 세워가면서 수출농업에 진력하고 있다. 우리 시장을 파고드는 것은 미국 농산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사방으로부터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을 현실로 체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농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특히, 경작 면적이나 농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전남의 경우 농업의 활로모색은 절박하다.

냉정하게 보면,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 '소비자주권시대'에 살고 있다. 농산물도 예외가 아니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농산물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저가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입농산물을 두려워하고 있다. 답은 간단하다. 값이 싸거나 품질이 좋기 때문이다. 아니면 값도 싸고 품질도 좋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웰빙시대에 걸맞게 안전 식품 위주로 선호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매의 편의성, 조리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거의 확실하다. 저렴한 고품질 농산물, 그리고 안전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위주의 유통체제로 가야 한다. 그러나 땅값이나 인건비가 높은 우리 실정으로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큼의 낮은 가격 농산물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고품질과 높은 안전성, 그리고 유통의 개선에 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개량, 재배법, 저장 및 유통환경이 총체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우리의 농업정책은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지금 수입품에 대응할 만큼 좋은 농산물 품종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각 분야의 농산물을 고품질 육종부터 서둘러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

식품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맹독성 농약이나 과다한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재배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수입과정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농약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농산물의 확실한 비교우위는 적어도 맹독성 농약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생존전략의 핵심이다.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오고 있는 전남지역은 이러한 면에서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지화를 꾀해야 하고 품목과 품종을 단지별로 통일해야 한다. 지자체와 농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농업구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들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유통개선과 함께 표준화와 브랜드화도 이뤄져야 한다. 전남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차츰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문제이다. 수도권에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물류거점을 계획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우리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내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분별있는' 소비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